한국경제포럼 제15권 제2호 51-77
DOI : 10.22841/kefdoi.2022.15.2.003

코로나19 보건위기와 가족친화정책*

김 정 호**

논문초록

본 연구는 가족친화정책이 코로나19 보건위기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완화시켰는지를 조사한다. OECD 국가 단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족친화정책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은 보건위기 시기에 여성과 남성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비스 지원과 모성 및 부성 휴가제도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2009년에 발생한 세계금융위기 시기에는 부성휴가가 남성의 고용 악화를 완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난적 위기 시기에는 자녀를 둔 부모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육서비스나 휴직제도보다는 현금성 지원 정책이 부모의 고용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핵심 주제어: 코로나19 보건위기, 가족친화정책, 성별 고용격차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H50, J21

투고 일자: 2021. 12. 13. 심사 및 수정 일자: 2021. 12. 29. 게재 확정 일자: 2022. 4. 20.

*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안정성과 포용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 정책 분석: 출산·보육, 부동산, 금융 및 보건위기를 중심으로』(이명헌 외, 2021) 중 제3장 "재난적 위기와 가족친화정책"의 내용을 기초로 수행한 심화 연구의 결과임을 밝힌다. 아울러 이 논문의 주장은 전적으로 저자의 견해이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20S1A3A2A02104190).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유용한 조언을 해준 익명의 두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mail: jungho@ajou.ac.kr

Ⅰ. 서 론

과거의 경기 침체 시기에는 대체로 여성보다 남성의 고용이 더 큰 폭으로 영향을 받았다. 그 원인으로 노동 수요 측면에서는 경기에 민감한 산업인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남성의 비중이 높은 반면, 경기에 덜 민감한 보건 및 교육 등 서비스업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높은 현상을 지목할 수 있다. 노동 공급 측면에서는 가구 내에서 주부양자의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두 번째 부양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소득을 늘리려고 하는 경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미국에서 1990년대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전체 노동시간의 경기 민감도가 줄어드는데 기여했다는 연구도 있다(Albanesi, 2019).

그러나 2019년 말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 보건위기 하에서는 많은 국가에서 노동시장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관찰된다(Collins et al., 2020; Alon et al., 2020; Albanesi and Kim, 2021; Kim, 2021).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총수요 부족에 따른 경기 침체와는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여성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이 위축되었다. 한편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학교와 보육시설이 장기간 폐쇄됨에 따라 자녀 돌봄 부담으로 인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향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실증적으로 Albanesi and Kim(2021)는 미국에서 직종의 특성 관련하여 대면 접촉의 강도가 높고 근무 장소가 유연하지 않은 직종에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을 수요측 요인으로 해석하는 경우 보건위기로 인한 성별 고용률 격차 변화의 약 3분의 1이 수요측 요인에 기인한다고 추론하였다. 또한 경제활동 상태에서 비경제활동 상태로의 이동을 공급측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이행이 자녀를 가진 여성에게 더 강하게 관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Collins et al. (2020)은 미국 Current Population Survey를 이용하여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어린 자녀를 가진 여성이 남성에 비해 4~5배 더 많이 근로시간을 줄였고, 근로시간의 남녀 격차가 20~50퍼센트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의 사례를 조사한 Kim(2021)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경제활동 상태에서 비경제활동 상태로의 이행하는 경향이 39-44세 기혼 여성에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 자녀 돌봄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이 성별 격차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 보건위기의 파급효과가 가족친화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노동공급 측면에서, 부모가 자녀 돌봄과 노동시장 참여를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확립되어 있다면 재난적 위기로 인한 성별 경제적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사회의 전반적인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부모가 보육시설 등 가족친화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사회적 육아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경우 보건위기 시 남성과 여성의 생산성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위기 시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종사하는 육아 인프라 관련 산업의 수요가 줄어든다면, 성별 고용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재난적 위기 하에서의 가족친화정책의 역할은 실증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와 동시에 노동수요에 의해 육아의 사회적 육아 인프라가 개선될 수도 있다. 실제로 보건위기로 인해 기업이 유연한 근로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가 사회규범으로 정착하는 현상이 보고된 바 있다(Alon et al., 2020).

본고에서는 코로나19 보건위기로 인한 국가별 성별 노동시장 성과의 격차를 살펴보고, 가족친화정책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적절한 가족친화정책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보건위기가 남성과 여성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어떠한 정책이나 제도가 그러한 파급효과를 완화시켰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재난적 위기 시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이후의 논의는 아래와 같다. 다음 장에서는 최근 주요 경제위기 시기의 성별 노동시장 성과를 관찰하고, 제Ⅲ장에서는 주요 국가의 보건위기 대응 정책의 특징을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국가단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고, 제Ⅴ장에서는 논의를 요약한다.

Ⅱ. 경제 위기 시 성별 노동시장 성과

1. 세계금융위기와 코로나19 보건위기

2000년대 이후 첫 번째 세계적인 경제 위기는 미국 주택시장의 거품 붕괴로 촉발된 세계금융위기이다. 세계금융위기는 대침체(The Great Recession)이라고도 불리는데,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2007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지속되었다. 주식시장에서는 다우존스 지수가 2007년 10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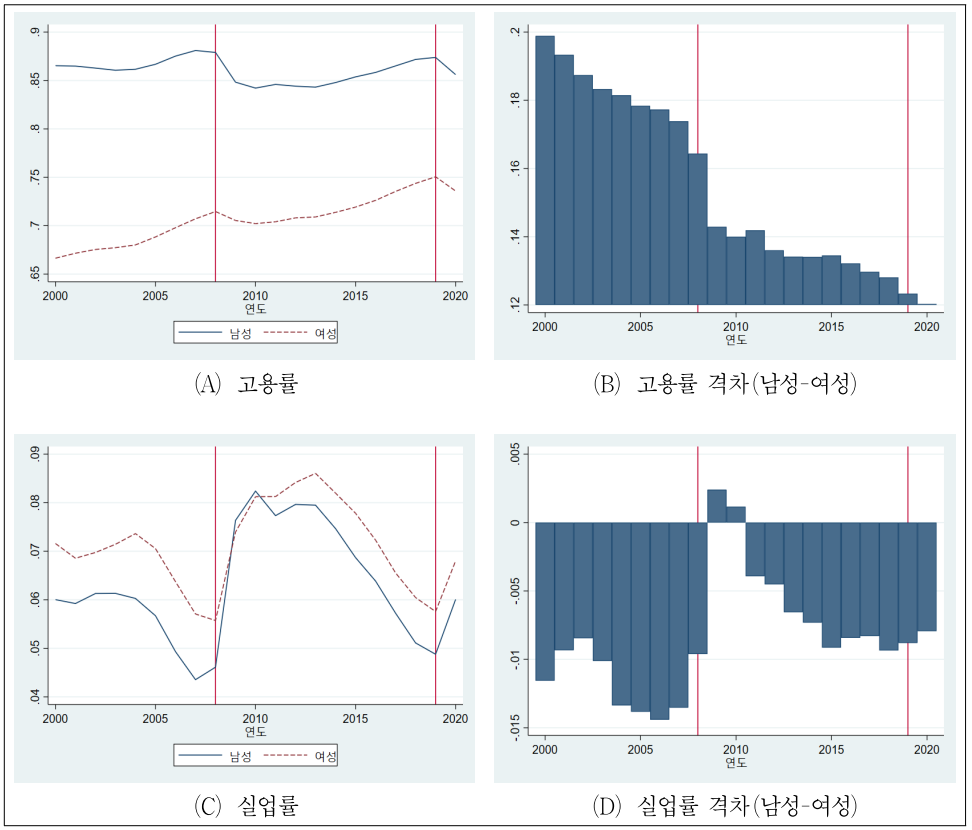
14,164.53을 기록한 이후 2009년 3월 6일 6443.27을 기록하여 17개월에 걸쳐 54%가 하락하였다. 〈그림 1〉의 패널 (A)에 제시된 OECD 국가의 25-54세 성별 평균 고용률 추이를 보면, 2008년 이후 여성에 비해 남성의 성과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가, 경기 회복기에는 더 빠르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패널(B)는 성별 고용률 격차가 2007년의 17.4%p에서 2010년에는 14.0%p로 감소하였다가 2011년에는 14.2%로 소폭 증가하였는데, 장기적인 격차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경기 회복기 남성의 상대적 성과를 유추할 수 있다. 패널 (C)와 패널 (D)에 제시된 실업률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여성 실업률보다 낮았던 남성 실업률이 2008년 이후 상승하여 여성 실업률을 상회하였다가 2011년 이후 다시 하회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 지역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이후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어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1월 30일에 국제적 보건 응급 상황을 선포했고, 3월 11일에는 보건위기임을 선포하였다. 2021년 12월 1일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수는 2억 6천 3백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사망자수는 525만 명에 이르렀다. 국가별로 감염 수준의 큰 차이가 났고, 시기별로도 큰 편차가 발생했다. 〈그림 1〉의 패널 (A)에 의하면, OECD 국가의 25-54세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이 코로나19 보건위기 이전에 모두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성별 고용률 격차는 줄어들고 있었다. 2020년에는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각각 1.8%p와 1.3%p 하락하여, 성별 격차는 0.3%p 줄어들었으나, 이전의 고용률 격차의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세계금융위기 시기에 비해 여성 고용이 더 많이 위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패널 (B)). 실업률도 남성과 여성의 경우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위와 같이 OECD 국가 전체적으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시 여성에 비해 남성의 고용률이 더 크게 하락하였고, 이후 경기 회복기에 남성의 고용률이 더 빠르게 상승하였다. 따라서 성별 고용률 격차가 세계금융위기 시기에 줄어들었다가 경기 회복기에 다시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2020년 코로나19 보건위기 시에는 남성과 여성 고용률 하락폭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 세계경제위기 시기에 비해 여성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진함을 알 수 있다.[1)]

1) 국가별로 한국, 미국, 호주의 경우, 코로나19 보건위기 초기 국면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고용이 더 빠르게 악화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스웨덴의 경우, 보건위기 초기에 성별 고용률 격차가 줄었다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방역 상황이나 경제 위기 대응과 같은 정책의 차이에 기인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육아휴직과 같은 가족친화 정책이 여성 고용 악화에 대한 일시적인 완충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림 1〉 OECD 국가 25-54세 성별 평균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A) 고용률 (B) 고용률 격차(남성-여성)

(C) 실업률 (D) 실업률 격차(남성-여성)

자료: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

다음으로 OECD 국가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수준과 노동시장 성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그림 2〉에 의하면, 분기 기준으로 코로나19 보건위기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2020년 2분기에 확진자수와 고용률 사이의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감염 수준이 가장 심각한 칠레가 분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인구 백만 명당 1만4천여 명을 기록했고, 25-54세 고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13.7%p 하락하였다. 미국은 확진자수가 인구 백만 명당 7천4백여 명이었고, 동연령대 고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8.2%p 하락하였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확진자수가 인구 백만 명당 5천여 명 이내였고, 전년 동기 대비 고용률 하락폭이 5%p 이내였다. 2020년 3분기에도 감염 수준이 높을수록 고용률 하락폭이 더 큰 경향을 보였는데, 상관관계는 2분기에 비해 약화되었다. 미국의 3분기 신규 확진자수는 인구 백만 명당 1만4천여 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5-54세 전년 동기 대비 고용률 하락폭은 5.1%p로 2분기에 비해 줄어들었다.

감염수준이 가장 낮은 우리나라의 신규 확진자수는 인구 백만 명당 215명이었고, 고용률 하락폭은 1.9%p를 기록했다.

2020년 4분기에는 전체적으로 신규 감염자수가 3분기에 비해 더 늘어났으나, 고용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4분기 신규 확진자수는 인구 백만 명당 3만9천여 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5-54세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4.24% 하락하여 하락폭이 3분기 대비 약간 줄어들었다. 프랑스의 신규 확진자수는 3만2천여 명에 달했으나,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0.3%p 하락하였다. 전체적으로 감염 수준과 고용률 변동폭 사이에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2021년 1분기도 2020년 4분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코로나19 보건위기 발생 이후 미국과 남미 국가에서 노동시장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수준이 높아졌으나 고용률 하락폭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감염 수준이 높았던 국가에서 2020년 말 이후 봉쇄 수준을 완화하면서 노동시장이 소폭 회복세를 보인 경향에 기인한다.

〈그림 2〉 분기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와 25-54세 고용률 변화

자료: OECD statistics(https://stats.oecd.org), Our World in Data (https://github.com/owid/covid-19-data/tree/master/public/data/).

2. 가족친화정책과 경제위기의 파급효과

코로나19 보건위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본으로 하는 방역 대책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경제침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가구 내에서 자녀 돌봄의 부담이 여성에게 가중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자녀를 가진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고되었다(Collins et al., 2020; Alon et al., 2020; Albanesi and Kim, 2021; Kim, 2021). 만약 자녀 돌봄 부담이 여성의 고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면, 가족친화정책이 보건위기의 파급효과를 완화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면, 방역 상황에 따라 부모가 가족친화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면, 가족친화정책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이 일시적으로 휴원할 수도 있고, 집단생활에 따른 감염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가 보육시설 이용을 기피할 수도 있다.

OECD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유아(0세~5세) 아동의 양육과 부모의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가족친화정책으로 정의하고 예산 규모를 측정하는데, 아동수당, 보육서비스 지원,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등의 정책이 포함된다.[2] 물론 예산 규모는 가족친화정책 수준의 한 측면만을 나타내므로 완벽한 지표라고 볼 수 없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 최대 기간이나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가족친화정책 예산 규모가 대체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장하는 환경과 상관관계가 높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리 지표로 활용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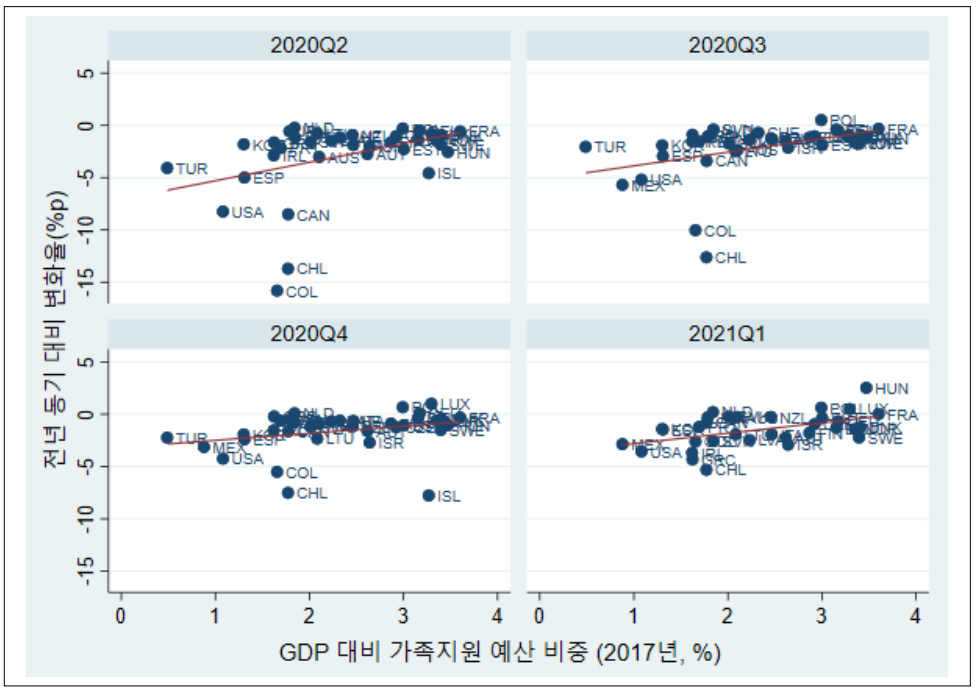
가족지원예산은 현금지원, 현물지원, 세제혜택을 합하여 GDP 대비 비중으로 측정한다. 2017년 기준 OECD 국가는 가족친화정책으로 평균 GDP의 2.34%를 지출했고, 이 중 현금 급여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각각 1.16%와 0.9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국가 중 가족친화정책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프랑스로 GDP의 3.60%를 지출하였고, 가장 작은 나라는 미국으로 1.08%를 배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가족친화정책 예산 규모는 GDP의 1.30%로 OECD 국가 중 규모가 4번째로 작다.

〈그림 3〉은 코로나19 보건위기 시기 가족지원예산의 규모와 25-54세 전체 고용률 변화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가족친화정책 지표는 자료상 가장 최근 연도인 2017년

2) 가족을 포함하여 일반 국민을 지원하는 보건이나 주거지원 정책은 제외된다.

수치를 이용하였다. 2020년 2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 가족친화정책 예산 규모가 클수록 고용률의 전년 동기 대비 하락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고용률 변동폭과 가족친화정책 예산 규모 사이의 상관관계 계수는 분기별로 0.3~0.5 사이의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관계는 가족친화정책이 코로나19 보건위기 시기에 노동시장에서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림 3〉 가족지원 예산과 분기별 25-54세 고용률 변화



자료: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

Ⅲ. 주요 국가의 보건위기 대응 정책

코로나19 보건위기에 대응하여 각국 정부는 다양한 경기부양 정책을 시행하였다. 대응 정책은 크게 재정 지출과 유동성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전 국민 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지원 및 조세 감면,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수당,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보조금 및 사회보장세 지원 등을 포함한다. 유동성 지원 방안에는 자본 투입, 대출, 자산 구매 및 채무 인수 등의 직접적인 자금 투입 방식과 지급보증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방식이 있다.

〈표 1〉에 제시된 IMF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재정 지출이나 조세 감면으로 GDP 대비 3.4%를 투입하였는데, 이 중 대부분이 보건 이외의 부문(3.2%)에 해당한다. 주요 국가 중 재정 지출 및 조세 감면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미국과 호주로 각각 GDP 대비 16.7%와 16.2%를 지출하였고, 이는 우리나라 규모의 5배에 근접한다. 독일의 재정지출 규모는 GDP 대비 11.0%이고 프랑스의 규모는 7.7%로 각각 우리나라 규모의 3배와 2배가 넘는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스웨덴의 재정지출 규모는 GDP 대비 4.2%로 보건 부문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유동성 지원 규모는 GDP 대비 10.2%로 지급보증(3.7%)과 준재정대응(6.5%)로 구분된다.[3] 〈표 1〉에 제시된 국가 중 유동성 지원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독일로 GDP 대비 27.8%였고, 그 다음은 프랑스로 지원 규모가 15.8%였다. 미국과 호주의 유동성 지원 규모는 각각 GDP 대비 2.4%와 1.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주요 국가에서 유동성 지원은 주로 지급보증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주요 국가의 2020년 코로나19 보건위기 대응 정책 규모(GDP 대비 비율, %)

국가	재정지출 및 조세감면			유동성지원			
	소계	보건 부문	보건 이외 부문	소계	자본 투입, 대출, 자산 구매, 채무 인수	지급보증	준재정대응
한국	3.4	0.3	3.2	10.2	-	3.7	6.5
스웨덴	4.2	0.8	3.4	5.3	0.2	5.1	-
프랑스	7.7	0.8	6.9	15.8	0.9	14.8	-
독일	11.0	1.2	9.8	27.8	3.0	24.8	-
호주	16.2	0.8	15.3	1.8	0.8	1.0	-
미국	16.7	2.3	14.4	2.4	0.3	2.2	-

주: 국가별 재정지출 규모는 2020년 말 기준이고, GDP는 2021년 1월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IMF) 수치에 기초함.

자료: IMF, Database of Country Fiscal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and IMF staff estimates.

코로나19 보건위기에 대응한 주요 국가의 재정정책 중 가구 및 개인에 대한 지원은 주로 고용유지를 위한 보조금이나 실업수당 지급 확대 등 노동시장을 통해 이루어졌

3) 우리나라의 준재정대응은 국책금융기관 지원 중소기업 대출 확대(21.2조원), 기간산업 안정기금(40조원), 채권시장 안정기금(20조원) 등을 포함한다.

다. 그 외에 가구 내 자녀의 돌봄 지원 대책에 해당하는 정책을 추려보면 〈표 2〉와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4월에 만 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되었고, 9월에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의 육아지원금이 지급되었다. 그리고 가구 전체를 지원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취약계층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육아휴직 제도가 미비한 미국에서는 유급병가 휴가 지원을 통해 자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였다. 미국의 재정 지출 중 가장 중요한 정책은 실업수당 확대였고, 그 외에 2020년 3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둔 독일에서는 아동 1인당 300유로에 달하는 수당을 지급하

〈표 2〉 주요 국가의 보건위기 대응 가구내 돌봄 지원 정책(2020년)

국가	내용
한국	- 아동돌봄쿠폰 지급, 만 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 - 1차 재난지원금(2020.5),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 - 2차 재난지원금(2020.9), 고용취약계층, 생계위기가구, 육아부담 가구 지원금(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미국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2020. 3. 18.), 유증상자, 자가격리자에게 일 최대 511달러, 자녀 돌봄으로 인한 병가 일 최대 200달러 지원 - 1차 재난지원금 지급(recovery rebates, 2020. 3. 27.), 성인 1인당 1,200달러, 자녀는 1인당 500달러 지급 - 2차 재난지원금 지급(2020. 12. 27.), 1인당 600달러 지급
독일	- 아동 한 명당 300유로의 수당 지급(2020. 6.) - 단축근로지원금(Kurzarbeit) (2020. 3.),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 감소 지원
프랑스	- 410만 취약가정 특별 지원금(Prime de précarité) (2020. 4. 25.) - RSA(적극적 연대소득), ASS(특별연대수당) 수혜 가정의 경우 5월 15일 부로 150유로의 특별 지원금 및 자녀 1인당 100유로씩의 지원금 지급 - RSA ASS 비수혜자면서 주거수당을 받는 가정의 경우 자녀 1인당 100유로씩 지원금 지급/9억유로 규모
스웨덴	- 단기 휴가에 대한 임금 보조금 추가지급 -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주택 수당지급
호주	- 코로나19 재난지원금(JobKeeper, 2020. 3), COVID-19 봉쇄조치로 인해 수입이 끊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900억 달러 규모

자료: (한국)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코로나19 경제대책; (미국) 윤성주 외(2021); (독일) 예금보험공사(2020), 박성욱(2020); (프랑스) 한국경영자총협회(2020); (스웨덴) 김계현 외(2021); (호주) 이기쁨(2020).

였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프랑스는 취약계층의 가구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일부 계층에 대해서 아동수당을 지급하였다. 스웨덴에서는 단기 휴가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주택수당을 지급하였다. 호주에서는 봉쇄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외에 자녀 돌봄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없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재난적 위기 상황에서 주요 국가의 정부는 가구 내 자녀 돌봄을 위해 필요한 단기 휴가를 지원하거나 현금급여를 지원하였으나, 전체 재정지출 중에서 이러한 돌봄 지원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Ⅳ. 가족친화정책과 보건위기 파급효과의 관계

1. 모형과 자료 설명

재난적 보건위기가 발생했을 때 가족친화정책이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가 단위의 통계 분석을 수행한다. 고용률 결정요인을 추정하기 위해 동태패널모형을 상정하고 1차 차분식으로 표현한 회귀분석 모형은 아래와 같다.

$$Y_{jt} = \beta_1 \triangle Y_{jt-1} + \beta_2 \triangle Yr2020_t + \beta_3 \triangle Family_{jt} + \beta_4 \triangle Yr2020_t \times Family_{jt} + \beta_5 \triangle X_{jt} + \triangle \tau_t + \triangle \epsilon_{jt} \quad (1)$$

위 식의 종속변수인 Y_{jt}는 국가 j가 연도 t에 경험한 남성 또는 여성 고용률을 나타낸다. 노동시장의 연속성으로 인해 이번 기간 고용률은 지난 기간 고용률과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관계로 인한 내생성을 교정하기 위해 Arellano and Bond(1991)가 제시한 바와 같이 각 변수의 시차 변수를 도구변수로 활용하는 GMM 모형을 추정한다. 코로나19 보건위기가 발생한 시기는 2020년으로 간주하여 해당 기간이 2020년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 $Yr2020_t$가 보건위기 시기를 가리킨다. 가족친화정책의 수준을 의미하는 변수 $Family_{jt}$에는 가족에 대한 현금성 지원, 현물 지원과 모성 및 부성 유급휴가의 최대 기간이 포함된다. 변수 $Yr2020_t$와 변수 $Family_{jt}$의 교차항 계수 β_4 는 보건위기 시기에 관대한 가족친화정책을 가지는 국가의 고용률이 그렇지 않은 국가의 고용률에 비해 얼마나 더 높았는지를 측정한다. 즉,

가족친화정책이 보건위기의 충격을 완화한다면, β_4 가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beta_4 > 0$).

그 외의 설명변수인 X_{jt}는 국가 j 연도 t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보건위기 시기의 코로나19 누적확진자수와 정부의 재정 및 금융 정책 수준 그리고 연도별 인구의 연령 구성비 등을 포함한다. 관찰되지 않는 특성으로 τ_t는 연도별 거시경제적인 충격을 가리키고, ϵ_{jt}는 매 시기 개별 국가의 노동시장 변화를 일으키는 상호 독립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식 (1)의 특징 중 하나는 차분으로 인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국가 고유의 특징이 통제된다는 점이다.

가족친화정책의 파급효과를 추정함에 있어서 각국의 가족친화정책 수준의 변화와 코로나19 보건위기의 발생이라는 두 가지 편차를 이용하므로, 위의 통계모형은 이중차감법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여기서 인과적 추론을 위한 가정은 가족친화정책 수준이 높게 상승한 국가의 가상적(counterfactual) 고용률 변화가 가족친화정책 수준이 낮게 상승한 국가의 고용률 변화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재난적 보건위기 시기와 비교하여 세계금융위기 시기의 가족친화정책의 역할을 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형을 고려한다.

$$\begin{aligned} Y_{jt} = {} & \alpha_1 \triangle Y_{jt-1} + \alpha_2 \triangle Yr2009_t + \alpha_3 \triangle Family_{jt} \\ & + \alpha_4 \triangle Yr2009_t \times Family_{jt} + \alpha_5 \triangle X_{jt} + \triangle \tau_t + \triangle \nu_{jt} \end{aligned} \tag{2}$$

위 식에서 교차항 계수 α_4는 세계금융위기기 발생한 시기를 2009년으로 간주하여, 가족친화정책 수준 $Family_{jt}$에 따라 세계금융위기의 파급효과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측정한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패널 자료이다. OECD statistics, OECD family database, IMF Database of Fiscal Policy Responses to COVID-19를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33개 국가의 자료를 구축하였다. OECD 국가는 총 38개인데, 일부 연도의 고용률 지표가 없는 국가 2개가 제외되었고, 추가로 일부 가족친화정책 지표가 없는 국가 3개가 제외되었다.[4] 최종 표본은 2개국을 제외하고는 균형 패널이고, 요약 통계는 〈표 3〉와 같다.[5] 기본 분석

4) 고용률 지표가 불완전한 국가는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이고, 일부 가족친화정책 지표가 불완전하여 제외된 국가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이다.

외에 보건위기에 대응한 재정 정책 지표가 있는 국가 23개국을 대상으로 추가 분석이 수행되었다.[6]

가족친화정책의 재정 지출 수준을 수혜대상 1인당 지출 규모로 측정하기 위해 1인당 GDP 대비 0-4세 아동 1인당 가족친화정책 예산 비중으로 산정하였다.[7] 정책은 현금성 지원과 현물 급여로 구분하였다. OECD family database에는 본고 작성 시점 기준으로 가족친화정책 지표가 최근 1~3개 연도에 대해서는 수집되지 않아, 집계되지 않은 정책 지표를 예측하여 자료를 구축하였다.[8] 첫 번째로 각 국가별 정책 지표의 시계열을 2차식으로 추정하여 예측치를 활용하였고, 두 번째로 가장 최근에 관측된 가족친화정책 규모가 이후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예측하였다. 두 예측치를 이용한 분석 결과가 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이후 논의에서는 첫 번째 예측치를 이용한 결과를 제시한다.

〈표 3〉에 제시된 요약통계에 의하면, 자녀 양육의 부담을 갖는 주요 연령층으로 볼 수 있는 25-54세 남성의 고용률 평균은 86.3%이고, 동 연령대 여성의 고용률은 70.7%이며, 성별 격차는 15.6%p이다. 세부 연령대별로는 남성의 경우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 연령이 상승할수록 고용률이 상승하다가 40대 초반 이후에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성의 경우도 20대 후반 이후 고용률이 상승하다가 40대 후반 이후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가족친화정책의 지표로서 1인당 GDP 대비 0-4세 아동 1인당 현금성 지원의 비중은 평균 21.7%이고, 보육서비스와 같은 현물 급여의 비중은 평균 14.8%이다. 2020년 기준 출산전후 휴가, 가족돌봄 휴가, 육아휴직을 합한 모성 유급휴가 기간은 평균 1.11년(57.4주)이고, 남성에게 명시적 또는 실질적으로 할당된 부성 유급휴가 기간은 평균 0.13년(6.7주)이다.

---

5) 칠레는 6개 연도, 에스토니아는 4개 연도에 있어서 일부 가족친화정책 지표가 없으나, 두 경제위기에 걸쳐 자료가 존재하여 최종 표본에 포함하였다.

6) 코로나 보건위기에 대응한 재정정책 지표가 없어 추가 분석에서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가 제외되었다.

7) 보다 정확하게는 영유아(0-5세) 1인당 수치로 산정함이 적절하나, 인구 통계가 5세 단위로 제공되어 0-4세 아동을 수혜대상으로 가정하였다.

8) 가족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 규모 지표가 2017년까지 집계된 국가수는 22개국이고, 2018년까지 집계된 국가수는 9개국이며, 2019년까지 집계된 국가수는 2개국이다.

〈표 3〉 요약 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25-54 남성 고용률	0.863	0.043	0.704	0.953
25-54 여성 고용률	0.707	0.108	0.244	0.862
25-54 성별 고용률 격차	0.156	0.104	0.014	0.574
25-29 남성 고용률	0.811	0.067	0.532	0.934
30-34 남성 고용률	0.879	0.044	0.693	0.974
35-39 남성 고용률	0.891	0.038	0.746	0.971
40-44 남성 고용률	0.886	0.040	0.736	0.989
45-49 남성 고용률	0.870	0.048	0.707	0.960
50-54 남성 고용률	0.833	0.065	0.580	0.950
25-29 여성 고용률	0.680	0.108	0.260	0.869
30-34 여성 고용률	0.691	0.107	0.253	0.884
35-39 여성 고용률	0.713	0.106	0.270	0.867
40-44 여성 고용률	0.736	0.112	0.246	0.903
45-49 여성 고용률	0.732	0.125	0.221	0.918
50-54 여성 고용률	0.685	0.141	0.186	0.910
가족 현금급여(1인당 GDP 대비 0-4세 아동 1인당 지출 비중)	0.217	0.122	0.000	0.618
가족 서비스(1인당 GDP 대비 0-4세 아동 1인당 지출 비중)	0.148	0.095	0.004	0.423
유급 모성 휴가(년)	1.105	1.033	0.000	4.115
유급 부성 휴가(년)	0.129	0.235	0.000	1.038
로그 코로나19 확진자수(백만 명당)	0.478	2.140	0.000	11.214
보건위기 시 추가재정지출(%)*	0.388	2.109	0.000	19.063
보건위기 시 지급보증(%)*	0.502	3.002	0.000	35.480
0-14세 인구 비중	0.180	0.040	0.120	0.342
65세 이상 인구 비중	0.155	0.040	0.050	0.288

주: 대상 국가수는 33개국이고 관측치수는 683개임. 단, 보건위기 시 대응정책 지표(*)의 경우 대상 국가수가 23개국이고 관측치수가 477개임.

자료: OECD statistics, OECD family database, IMF Database of Fiscal Policy Responses to COVID-19.

그리고 2020년 한 해 동안 누적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인구 백만 명당 평균 29,377명이고, 보건위기에 대응한 정부의 평균 재정지출 규모는 GDP 대비 7.9%, 대출이나 지급보증 규모는 GDP 대비 9.6%에 이른다.[9] 인구 구조 관련하여 유소년 인구 비율과 노인 인구 비율은 표본 평균은 각각 18.3%와 15.3%이다.

9) 〈표 3〉에 제시된 보건위기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 규모는 2020년 이전 연도에는 0의 값을 가지므로, 그 평균값이 본문의 수치와 다르다.

2. 코로나19 보건위기와 가족친화정책

재난적 보건위기 상황에서 가족친화정책과 25-54세 고용률 사이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2020년 더미와 가족친화정책 지표의 교차항 계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모형 (1)에서는 보건위기 시기에 가족에 대한 현금 급여와 부성 유급휴가가 남성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동 1인당 현금 급여가 1인당 GDP 대비 1%p 증가하면, 보건위기 시 남성 고용률이 0.10%p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부성 유급휴가가 5주(0.1년) 연장되면, 남성 고용률이 0.20%p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현물 급여나 모성 휴가는 남성 고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에도 보건위기 시기에 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과 부성 휴가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1인당 현금 지원 규모가 1인당 GDP 대비 1%p 증가하면, 보건위기 시 25-54세 여성 고용률이 0.11%p 상승하고, 부성 유급휴가가 5주(0.1년) 늘어나면, 여성 고용률이 0.15%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에 대한 현금성 지원과 부성 휴가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보건위기의 충격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성별에 따라 차등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고용률 격차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 (3)의 경우 어느 정책도 보건위기 시기에 성별 격차를 더 늘리거나 줄이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코로나19 보건위기 시기에 각국 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재정지출과 대출지원을 시행하였는데, 이러한 대응이 가족친화정책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관대한 가족친화정책을 가진 나라에서 위기 시에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면, 누락변수 편의로 인해 가족친화정책 효과가 과대 추정될 소지가 있다. 이론적으로 그 반대의 상관관계도 가능하다.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보건위기 시 정부 대응 수준을 통제한 결과가 〈표 4〉의 모형 (4)~(6)에 제시되어 있다. 자료 제약으로 인해 이 분석은 전체 33개국 중 23개국에 대해서 수행되었다. 두 표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23개국에 대해서 모형 (1)~(3)과 동일한 모형을 추정한 결과도 모형 (1)~(3)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결과는 제시되지 않음).

〈표 4〉 코로나19 보건위기 시기 가족친화정책이 25-54세 고용률에 미친 영향

	(1)	(2)	(3)	(4)	(5)	(6)
종속변수	남성	여성	고용률 격차	남성	여성	고용률 격차
Y(t-1)	0.8708	0.8206	0.9092	0.9141	0.8614	0.9190
	(0.0200)**	(0.0250)**	(0.0191)**	(0.0248)**	(0.0227)**	(0.0216)**
Y2020	-0.0133	-0.0102	0.0000	0.0164	-0.0186	0.0223
	(0.0179)	(0.0154)	(0.0168)	(0.0167)	(0.0153)	(0.0168)
가족 현금급여	-0.0313	-0.0203	-0.0014	-0.0184	-0.0392	0.0189
	(0.0130)*	(0.0097)*	(0.0119)	(0.0122)	(0.0103)**	(0.0121)
가족 서비스	-0.1290	-0.1025	-0.0009	-0.1066	-0.0826	0.0296
	(0.0276)**	(0.0237)**	(0.0291)	(0.0234)**	(0.0222)**	(0.0248)
모성휴가	0.0031	0.0039	0.0000	0.0038	0.0029	-0.0020
	(0.0026)	(0.0022)	(0.0024)	(0.0020)	(0.0021)	(0.0023)
부성휴가	-0.0016	0.0098	0.0027	0.0020	0.0037	0.0034
	(0.0052)	(0.0047)*	(0.0050)	(0.0038)	(0.0039)	(0.0041)
Y2020 × 가족 현금급여	0.0951	0.1140	-0.0227	0.0967	0.0990	0.0125
	(0.0179)**	(0.0149)**	(0.0165)	(0.0169)**	(0.0165)**	(0.0178)
Y2020 × 가족 서비스	-0.0037	-0.0010	0.0000	0.0132	0.0285	-0.0137
	(0.0187)	(0.0170)	(0.0182)	(0.0183)	(0.0184)	(0.0187)
Y2020 × 모성휴가	0.0002	-0.0017	0.0021	-0.0014	-0.0008	-0.0003
	(0.0025)	(0.0023)	(0.0024)	(0.0032)	(0.0032)	(0.0033)
Y2020 × 휴가	0.0199	0.0145	0.0083	0.0116	0.0047	0.0068
	(0.0069)**	(0.0059)*	(0.0062)	(0.0063)	(0.0060)	(0.0063)
Y2020 × 로그 코로나19	-0.0022	-0.0021	-0.0004	-0.0049	-0.0028	-0.0020
확진자수	(0.0015)	(0.0014)	(0.0014)	(0.0014)**	(0.0013)*	(0.0014)
Y2020 × 추가 재정지출				-0.0013	-0.0005	-0.0004
				(0.0003)**	(0.0003)	(0.0003)
Y2020 × 지급보증				0.0004	0.0005	-0.0001
				(0.0002)	(0.0002)**	(0.0002)
0-14세 인구 비중	0.0259	-0.2084	0.1163	-0.0712	-0.2552	0.0914
	(0.0721)	(0.0718)**	(0.0742)	(0.0608)	(0.0541)**	(0.0602)
65세 이상 인구 비중	0.1831	0.1032	0.0816	0.1525	0.2241	-0.0645
	(0.1157)	(0.1027)	(0.1139)	(0.0962)	(0.0974)*	(0.0965)
관측치수	617	617	617	431	431	431
검정(p-value)						
Sargan	0.000	0.000	0.002	0.000	0.000	0.201
1차 자기상관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2차 자기상관	0.000	0.994	0.004	0.039	0.640	0.033

주: 모든 모형은 1차 차분 일반화적률법(First-Difference GMM)으로 추정함. 모든 모형에서 연도효과가 통제됨. 괄호 안의 수치는 standard errors를 가리킴. * $p<0.05$; ** $p<0.01$.

〈표 4〉의 모형 (4)와 모형 (5)에 의하면, 보건위기 시기의 정부 재정지출 규모와 대출 및 지급 보증 규모를 통제한 경우에도 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이 남성과 여성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효과의 크기도 모형 (1), 모형 (2)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성 휴가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모형 (6)의 경우, 전체 표본과 마찬가지로, 보건위기 시 가족친화정책으로 인해 성별 고용률 격차가 달라졌다는 증거를 찾지는 못하였다.

그 외의 변수를 살펴보면, 모든 모형에서 종속변수와 지난 기간 변수 사이에 자기상관관계가 뚜렷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기간 중 현금성 지원과 서비스 지원의 직접적인 고용 효과는 남성과 여성에게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금 지원의 경우 직접적인 소득효과로 인해 남성과 여성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현물 급여의 경우에도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소득 효과가 지배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국가별 제도의 차이를 감안하여 결과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표 4〉의 모형의 타당성 검정 결과 대체로 모형이 적절하나 일부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모형에서 Sargan 과도식별제약(over-identification restriction)과 오차항이 0의 1차 자기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오차항이 0의 2차 자기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가설이 여성 고용률 모형에서만 기각되지 않았다. 따라서 남성 고용률과 성별 고용률 격차 모형의 경우 도구변수의 타당성이 의심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세부 연령대별로 가족친화정책의 효과가 다른지 살펴본다. 보건위기 시기에 정부의 대응 수준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자료가 가용한 2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5〉에 의하면, 보건위기 시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이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는 남성의 모든 연령대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30대 후반 남성의 경우 현금지원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성 휴가도 보건위기 시기에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 남성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 제시된 여성의 연령대별 효과를 보면, 위기 시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의 효과는 40대 초반을 제외한 모든 여성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의 부담이 20대 후반과 30대에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50대 초반 여성도 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가구 내의 자원 배분 관점에서 보면, 가구에 대한 현금지원이 조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기

〈표 5〉 코로나19 보건위기 시기 가족친화정책이 연령별 남성 고용률에 미친 영향

	(1)	(2)	(3)	(4)	(5)	(6)
연령 그룹	M25-29	M30-34	M35-39	M40-44	M45-49	M50-54
Y(t-1)	0.8804	0.8076	0.7968	0.8448	0.8916	0.9588
	(0.0315)**	(0.0389)**	(0.0402)**	(0.0338)**	(0.0322)**	(0.0287)**
Y2020	-0.0057	0.0053	-0.0062	0.0196	0.0350	-0.0186
	(0.0304)	(0.0242)	(0.0210)	(0.0211)	(0.0239)	(0.0226)
가족 현금급여	-0.0111	-0.0083	-0.0238	-0.0101	-0.0152	-0.0276
	(0.0231)	(0.0161)	(0.0151)	(0.0187)	(0.0167)	(0.0172)
가족 서비스	-0.1038	-0.0920	-0.0941	-0.0799	-0.1143	-0.1102
	(0.0402)**	(0.0307)**	(0.0301)**	(0.0268)**	(0.0308)**	(0.0313)**
모성휴가	0.0035	0.0038	0.0016	0.0027	0.0069	0.0037
	(0.0041)	(0.0030)	(0.0025)	(0.0029)	(0.0031)*	(0.0030)
부성휴가	0.0014	-0.0013	-0.0058	-0.0014	-0.0025	0.0054
	(0.0074)	(0.0057)	(0.0047)	(0.0047)	(0.0052)	(0.0048)
Y2020 × 가족 현금급여	0.0882	0.0950	0.1234	0.1033	0.1083	0.1171
	(0.0327)**	(0.0246)**	(0.0224)**	(0.0225)**	(0.0229)**	(0.0237)**
Y2020 × 서비스	0.0594	0.0127	0.0233	-0.0215	0.0075	0.0267
	(0.0344)	(0.0263)	(0.0243)	(0.0227)	(0.0252)	(0.0241)
Y2020 × 모성휴가	0.0013	0.0029	-0.0070	-0.0023	-0.0061	-0.0050
	(0.0064)	(0.0047)	(0.0042)	(0.0040)	(0.0044)	(0.0045)
Y2020 × 휴가	-0.0024	0.0100	0.0240	0.0178	0.0174	0.0295
	(0.0125)	(0.0090)	(0.0083)**	(0.0080)*	(0.0086)*	(0.0088)**
Y2020 × 로그 코로나19	-0.0053	-0.0047	-0.0030	-0.0049	-0.0056	-0.0021
확진자수	(0.0025)*	(0.0020)*	(0.0017)	(0.0017)**	(0.0019)**	(0.0019)
Y2020 × 추가 재정지출	-0.0017	-0.0012	-0.0010	-0.0013	-0.0012	-0.0006
	(0.0006)**	(0.0005)*	(0.0005)*	(0.0005)**	(0.0005)*	(0.0005)
Y2020 × 지급보증	0.0004	0.0003	0.0000	0.0003	0.0002	0.0003
	(0.0004)	(0.0003)	(0.0003)	(0.0003)	(0.0003)	(0.0003)
0-14세 인구 비중	-0.2057	-0.0537	-0.0808	-0.2600	-0.0268	-0.1302
	(0.1241)	(0.0991)	(0.0850)	(0.0924)**	(0.1013)	(0.0834)
65세 이상 인구 비중	0.2806	0.1852	0.1632	0.0278	0.1312	0.0530
	(0.1736)	(0.1400)	(0.1182)	(0.1081)	(0.1179)	(0.1224)
관측치수	431	431	431	431	431	431
검정 (p-value)						
Sargan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1차 자기상관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2차 자기상관	0.275	0.948	0.366	0.735	0.905	0.941

주: 모든 모형은 1차 차분 일반화적률법(First-Difference GMM)으로 추정함. 모든 모형에서 연도효과가 통제됨. 괄호 안의 수치는 standard errors를 가리킴. * $p<0.05$; ** $p<0.01$.

〈표 6〉 코로나19 보건위기 시기 가족친화정책이 연령별 여성 고용률에 미친 영향

	(1)	(2)	(3)	(4)	(5)	(6)
연령 그룹	F25-29	F30-34	F35-39	F40-44	F45-49	F50-54
Y(t-1)	0.8020	0.7895	0.8179	0.8754	0.8636	0.8426
	(0.0355)**	(0.0339)**	(0.0367)**	(0.0335)**	(0.0307)**	(0.0296)**
Y2020	-0.0022	-0.0214	0.0138	-0.0077	-0.0329	-0.0205
	(0.0284)	(0.0298)	(0.0272)	(0.0246)	(0.0253)	(0.0242)
가족 현금급여	-0.0459	-0.0497	-0.0345	-0.0233	-0.0128	-0.0162
	(0.0205)*	(0.0221)*	(0.0191)	(0.0194)	(0.0184)	(0.0195)
가족 서비스	-0.0726	0.0008	-0.0611	-0.1010	-0.1252	-0.1201
	(0.0402)	(0.0371)	(0.0391)	(0.0399)*	(0.0358)**	(0.0343)**
모성휴가	0.0014	0.0051	0.0007	0.0044	-0.0036	0.0043
	(0.0036)	(0.0040)	(0.0035)	(0.0032)	(0.0034)	(0.0036)
부성휴가	-0.0099	0.0024	0.0056	0.0000	0.0038	0.0045
	(0.0062)	(0.0064)	(0.0066)	(0.0062)	(0.0053)	(0.0054)
Y2020 × 가족 현금급여	0.0944	0.0981	0.1377	0.0338	0.0967	0.0889
	(0.0306)**	(0.0330)**	(0.0298)**	(0.0272)	(0.0275)**	(0.0259)**
Y2020 × 가족 서비스	0.0817	-0.0060	0.0315	0.0373	0.0606	0.0202
	(0.0322)*	(0.0331)	(0.0298)	(0.0281)	(0.0290)*	(0.0264)
Y2020 × 모성휴가	-0.0147	0.0000	-0.0064	0.0015	-0.0040	0.0021
	(0.0054)**	(0.0059)	(0.0052)	(0.0049)	(0.0051)	(0.0046)
Y2020 × 휴가	0.0112	0.0059	0.0060	-0.0042	0.0158	0.0074
	(0.0108)	(0.0113)	(0.0105)	(0.0096)	(0.0100)	(0.0098)
Y2020 × 로그 코로나19	-0.0024	-0.0030	-0.0064	-0.0025	-0.0011	-0.0005
확진자수	(0.0023)	(0.0025)	(0.0023)**	(0.0021)	(0.0021)	(0.0020)
Y2020 × 추가 재정지출	-0.0006	0.0001	-0.0005	-0.0005	-0.0009	-0.0006
	(0.0006)	(0.0006)	(0.0006)	(0.0005)	(0.0005)	(0.0005)
Y2020 × 지급보증	0.0007	0.0005	0.0006	0.0008	0.0002	0.0004
	(0.0004)	(0.0004)	(0.0003)*	(0.0003)**	(0.0003)	(0.0003)
0-14세 인구 비중	-0.2497	-0.4884	-0.3323	-0.0675	-0.2514	-0.1929
	(0.1020)*	(0.1206)**	(0.1003)**	(0.0980)	(0.0973)**	(0.0898)*
65세 이상 인구 비중	-0.0947	0.1944	0.0755	0.1565	0.2910	0.0104
	(0.1835)	(0.1666)	(0.1688)	(0.1432)	(0.1573)	(0.1354)
관측치수	431	431	431	431	431	431
검정 (p-value)						
Sargan	0.009	0.011	0.028	0.220	0.003	0.007
1차 자기상관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2차 자기상관	0.694	0.033	0.356	0.132	0.151	0.159

주: 모든 모형은 1차 차분 일반화적률법(First-Difference GMM)으로 추정함. 모든 모형에서 연도효과가 통제됨. 괄호 안의 수치는 standard errors를 가리킴. * $p<0.05$; ** $p<0.01$.

능을 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개별 국가 내의 미시적 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서비스 지원은 위기 시 20대 후반과 40대 후반 여성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서비스 지원이 보건위기 시 경력 초기 단계의 여성과 상당히 긴 경력이 있는 여성을 지원하는 데에 효과적임을 암시한다. 또한 노동 수요 측면에서 보육서비스 산업의 주요 종사자가 20대 후반과 40대 후반 여성일 가능성을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다. 반면, 모성 휴가는 위기 시 20대 후반 여성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선 20대 후반 여성은 모성 휴가의 주요 수혜자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 노동수요 측면에서 여성의 모성 휴가 이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기업이 신규 채용에 있어서 여성을 기피하는 현상을 반영할 수도 있다.

〈표 5〉와 〈표 6〉의 연령별 남성과 여성 고용률 모형의 타당성 검정 결과는 대체로 모형의 적절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40대 초반의 경우에만 Sargan의 과도식별제약 가설이 기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으로 보건위기 상황에서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 수준이 차별적으로 증가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만약 보건위기 시기에 부모의 수요가 높은 현금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하였다면, 본 분석의 현금 지원 효과 추정치는 실제 효과를 과대 추정할 소지가 있다. 본 분석에서는 현금 지원 실측치가 아닌 예측치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실제 자료를 입수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보건위기 시기의 재정정책 규모를 통제하고도 비슷한 규모의 현금 지원의 고용 효과가 관찰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가능성으로 인한 편의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3. 세계금융위기와 가족친화정책

세계금융위기는 코로나19 보건위기와 달리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자산가격 거품이 붕괴됨에 따라 실물 경제가 위축되면서 발생하였다. 세계금융위기 시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구 내 자녀 돌봄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부모가 노동시장 참여와 자녀 양육을 조화롭게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가족친화정책의 영향이 세계금융위기 시기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위기 시에 여성에 비해 남성의 고용이 더 빠르게 위축되었다는 점에서 노동공급 측면에서 두 그룹에 대한 효과가 다를 수 있다. 특히 경기 침체기 여성에게 부가근

로자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가족친화정책 수준이 높을수록 그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또한 가족친화정책 수준과 관련하여 위기 시 노동 수요의 변화도 작용할 수 있다.

세계금융위기 시기 가족친화정책 중 부성 휴가를 제외한 정책은 남성의 고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모형 (1)에 따르면, 가족친화정책 중 부성휴가가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에 25-54세 남성 고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제 위기 시 부성 유급휴가 기간이 5주(0.1년) 연장되면 남성 고용률이 0.3%p 상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모성 휴가 기간은 위기 시 남성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기 시에 가구 내에서 여성의 휴직 이용으로 남성이 노동공급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7〉의 모형 (2)는 세계금융위기 시기에 모성 휴가가 25-54세 여성의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가리킨다. 그 외의 가족친화정책의 수준은 위기 시 여성 고용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위기 시 모성 휴가의 부정적 효과는 의외의 결과이나, 노동 수요 측면에서 휴직 이용 가능성이 높아진 여성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형 (3)에 제시된 성별 고용률 격차에 대한 추정 결과를 보면, 세계금융위기 시기에 부성휴가 기간은 격차를 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성휴가가 위기 시 남성의 고용 악화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함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친화정책의 남성 세부 연령별 효과 추정치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남성의 경우 세계금융위기 시기에 부성휴가가 20대 후반과 30대 후반 그리고 40대 연령층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그 효과는 20대 후반의 경우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위기 시 모성휴가가 남성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40대 남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력이 있는 40대 여성이 경기 침체기에 육아휴직을 이용할 가능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9〉에 의하면, 여성의 경우 세계금융위기 시기에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이 20대 후반 여성의 고용을 높이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제 위기 시 가족에 대한 서비스 지원은 40대 초반과 50대 초반 여성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가근로자 효과와 서비스업이 경기 침체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기 시 가족 서비스 지원이 20대 후반 남성과 여성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가족 서비스 지원이 소득효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7〉 세계금융위기 시기 가족친화정책이 25-54세 고용률에 미친 영향

	(1)	(2)	(3)
종속변수	남성	여성	고용률 격차
Y(t-1)	0.8745	0.8383	0.9055
	(0.0199)**	(0.0252)**	(0.0186)**
Y2009	-0.0197	-0.0020	-0.0172
	(0.0045)**	(0.0041)	(0.0043)**
가족 현금급여	-0.0219	-0.0105	-0.0098
	(0.0127)	(0.0097)	(0.0117)
가족 서비스	-0.0985	-0.0639	0.0076
	(0.0274)**	(0.0236)**	(0.0283)
모성휴가	-0.0005	0.0019	0.0002
	(0.0025)	(0.0022)	(0.0024)
부성휴가	-0.0077	0.0081	-0.0003
	(0.0053)	(0.0048)	(0.0050)
Y2009 × 가족 현금급여	0.0036	0.0145	-0.0108
	(0.0132)	(0.0114)	(0.0123)
Y2009 × 가족 서비스	-0.0104	-0.0152	-0.0119
	(0.0191)	(0.0169)	(0.0182)
Y2009 × 모성휴가	-0.0039	-0.0044	0.0018
	(0.0018)*	(0.0016)**	(0.0017)
Y2009 × 부성 휴가	0.0309	0.0054	0.0233
	(0.0081)**	(0.0074)	(0.0077)**
0-14세 인구 비중	0.0592	-0.0878	0.0683
	(0.0717)	(0.0709)	(0.0725)
65세 이상 인구 비중	0.2100	0.0645	0.1336
	(0.1134)	(0.1031)	(0.1091)
관측치수	617	617	617
검정 (p-value)			
Sargan	0.000	0.000	0.002
1차 자기상관	0.000	0.000	0.000
2차 자기상관	0.002	0.826	0.008

주: 모든 모형은 1차 차분 일반화적률법(First-Difference GMM)으로 추정함. 모든 모형에서 연도효과가 통제됨. 괄호 안의 수치는 standard errors를 가리킴. * $p<0.05$; ** $p<0.01$.

〈표 8〉 세계금융위기 시기 가족친화정책이 연령별 남성 고용률에 미친 영향

	(1)	(2)	(3)	(4)	(5)	(6)
연령 그룹	M25-29	M30-34	M35-39	M40-44	M45-49	M50-54
Y(t-1)	0.7711	0.8028	0.8010	0.8340	0.8436	0.8950
	(0.0354)**	(0.0315)**	(0.0295)**	(0.0283)**	(0.0253)**	(0.0276)**
Y2009	-0.0358	-0.0219	-0.0251	-0.0210	-0.0037	-0.0097
	(0.0092)**	(0.0067)**	(0.0063)**	(0.0067)**	(0.0067)	(0.0068)
가족 현금급여	-0.0372	-0.0221	-0.0486	-0.0425	-0.0191	-0.0126
	(0.0246)	(0.0169)	(0.0169)**	(0.0195)*	(0.0171)	(0.0188)
가족 서비스	-0.0811	-0.0503	-0.0889	-0.0720	-0.1336	-0.1019
	(0.0485)	(0.0359)	(0.0358)*	(0.0374)	(0.0361)**	(0.0371)**
모성휴가	0.0045	0.0058	-0.0012	-0.0009	-0.0014	0.0012
	(0.0049)	(0.0037)	(0.0033)	(0.0039)	(0.0037)	(0.0036)
부성휴가	0.0078	0.0011	-0.0176	-0.0124	-0.0165	-0.0029
	(0.0104)	(0.0076)	(0.0075)*	(0.0075)	(0.0078)*	(0.0071)
Y2009 × 가족 현금급여	0.0360	-0.0189	0.0204	0.0195	0.0037	-0.0291
	(0.0262)	(0.0192)	(0.0179)	(0.0190)	(0.0189)	(0.0196)
Y2009 × 가족 서비스	-0.0854	-0.0214	0.0181	-0.0080	-0.0332	0.0234
	(0.0375)*	(0.0272)	(0.0265)	(0.0276)	(0.0283)	(0.0291)
Y2009 × 모성휴가	-0.0057	0.0031	-0.0047	-0.0057	-0.0071	-0.0027
	(0.0037)	(0.0026)	(0.0025)	(0.0026)*	(0.0026)**	(0.0028)
Y2009 × 부성 휴가	0.0540	0.0107	0.0254	0.0329	0.0334	0.0064
	(0.0159)**	(0.0115)	(0.0114)*	(0.0115)**	(0.0116)**	(0.0121)
0-14세 인구 비중	0.1545	0.2091	0.0077	-0.0490	0.2098	-0.0157
	(0.1651)	(0.1219)	(0.1046)	(0.1204)	(0.1253)	(0.1255)
65세 이상 인구 비중	0.4570	0.3330	0.3016	0.2746	0.2097	0.3295
	(0.2371)	(0.1735)	(0.1522)*	(0.1483)	(0.1506)	(0.1669)*
관측치수	617	617	617	617	617	617
검정 (p-value)						
Sargan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차 자기상관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2차 자기상관	0.135	0.645	0.107	0.724	0.009	0.700

주: 모든 모형은 1차 차분 일반화적률법(First-Difference GMM)으로 추정함. 모든 모형에서 연도효과가 통제됨. 괄호 안의 수치는 standard errors를 가리킴. * $p<0.05$; ** $p<0.01$.

〈표 9〉 세계금융위기 시기 가족친화정책이 연령별 여성 고용률에 미친 영향

	(1)	(2)	(3)	(4)	(5)	(6)
연령 그룹	F25-29	F30-34	F35-39	F40-44	F45-49	F50-54
Y(t-1)	0.5933	0.6728	0.7893	0.8410	0.8194	0.8377
	(0.0409)**	(0.0347)**	(0.0412)**	(0.0378)**	(0.0321)**	(0.0338)**
Y2009	0.0011	-0.0145	-0.0042	-0.0031	0.0126	0.0094
	(0.0081)	(0.0077)	(0.0074)	(0.0065)	(0.0070)	(0.0079)
가족 현금급여	-0.0250	-0.0217	0.0161	-0.0205	-0.0050	-0.0035
	(0.0223)	(0.0210)	(0.0213)	(0.0165)	(0.0181)	(0.0191)
가족 서비스	-0.1382	-0.0410	-0.0428	-0.0966	-0.0726	-0.1519
	(0.0423)**	(0.0425)	(0.0459)	(0.0375)*	(0.0379)	(0.0424)**
모성휴가	-0.0025	0.0031	0.0035	0.0017	-0.0005	0.0011
	(0.0041)	(0.0045)	(0.0041)	(0.0033)	(0.0040)	(0.0044)
부성휴가	-0.0182	-0.0004	0.0089	0.0004	0.0107	0.0006
	(0.0096)	(0.0085)	(0.0086)	(0.0074)	(0.0080)	(0.0087)
Y2009 × 가족 현금급여	0.0469	0.0338	0.0179	0.0146	-0.0290	0.0002
	(0.0228)*	(0.0218)	(0.0213)	(0.0180)	(0.0198)	(0.0211)
Y2009 × 가족 서비스	-0.0819	-0.0096	-0.0361	0.0737	-0.0393	0.0705
	(0.0328)*	(0.0324)	(0.0319)	(0.0270)**	(0.0292)	(0.0314)*
Y2009 × 모성휴가	-0.0027	-0.0060	0.0020	-0.0101	-0.0002	-0.0092
	(0.0031)	(0.0031)	(0.0030)	(0.0026)**	(0.0029)	(0.0031)**
Y2009 × 부성 휴가	0.0277	0.0005	-0.0057	0.0186	-0.0217	0.0057
	(0.0142)	(0.0140)	(0.0136)	(0.0118)	(0.0128)	(0.0131)
0-14세 인구 비중	-0.4760	-0.6069	-0.0170	0.1055	-0.0581	-0.0931
	(0.1519)**	(0.1434)**	(0.1466)	(0.1226)	(0.1168)	(0.1334)
65세 이상 인구 비중	-0.2344	0.3211	-0.1508	-0.1253	0.0220	-0.0860
	(0.2079)	(0.1925)	(0.1867)	(0.1595)	(0.1705)	(0.1740)
관측치수	617	617	617	617	617	617
검정(*p*-value)						
Sargan	0.000	0.000	0.021	0.000	0.000	0.000
1차 자기상관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2차 자기상관	0.680	0.549	0.417	0.004	0.196	0.025

주: 모든 모형은 1차 차분 일반화적률법(First-Difference GMM)으로 추정함. 모든 모형에서 연도효과가 통제됨. 괄호 안의 수치는 standard errors를 가리킴. * $p<0.05$; ** $p<0.01$.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가족친화정책이 재난적 위기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가족친화정책의 목표는 부모가 취업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주로 영유아를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보건위기는 이전의 경제위기와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고, 가구 내에서 자녀 돌봄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후자의 측면에서 보건위기 시기에 가족친화정책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코로나19 보건위기에 대응하여 각국 정부는 재정을 지출하고, 유동성을 지원하였다. 재정 지출 사업은 개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조세 감면, 실업수당과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보조금 등을 포함한다. 유동성 지원은 주로 지급보증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가족친화정책과 관련하여 주요 국가의 정부는 자녀 돌봄을 위해 필요한 단기 휴가를 지원하거나 자녀에 대한 현금급여를 지원하였으나, 그 규모는 전체 가계의 소득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보조적인 수준에 그쳤다.

OECD 국가 단위 패널 자료를 이용한 실증 분석 결과, 가족친화정책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은 보건위기 시기에 남성과 여성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서비스 지원과 모성 및 부성 휴가 기간은 보건위기 시기에 남성과 여성의 고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 발생한 세계금융위기 시기에는 가족친화정책의 효과가 다른 것으로 관찰되었다. 부성휴가가 위기 시 남성 고용의 악화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40대와 50대 여성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육아 서비스가 부가근로자 효과의 원활한 작동을 유도한 측면과 여성 고용 비중이 높은 관련 서비스업의 노동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난적 위기 시기에 현금성 지원 제도가 경제적 충격에 대한 완충 작용을 한다는 결과는 가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이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경우 보육서비스의 이용이나 육아휴직제도의 활용이 제한적일 수 있다. 향후 재난적 위기 발생 시 이와 같은 가족친화정책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책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거시 경제적 분석을 통해 경제 위기 시 가족친화제도의 역할을 총체적으

로 조사하였으나, 동시에 많은 질문을 남겼다. 특히 위기 시 가족친화제도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 측면에서 얼마나 설명될 수 있는지는 흥미로운 주제이다. 또한 개별 가족친화정책의 특성이 경제 위기 시 고용 성과와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 역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답이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1. 김계현 · 김진숙 · 이정찬 · 문성제 · 지성인 · 임선미 · 박정훈,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실태조사," 『의료정책포럼』, 제19권 제2호, 2021, pp. 45-67.
2. 김지연, "코로나19 고용충격의 성별 격차와 시사점," 『KDI 경제전망』, 제38권 제1호, 2021.
3. 박성욱, "주요국의 코로나 19 위치 정책 대응 및 시사점," 『KIF금융분석리포트』, 제2020권 제9호, 2020, pp. 1-34.
4. 예금보험공사, "주요국의 코로나19 정책 대응," 예금보험공사 자체연구보고서, 2020. 6. 24.
5. 윤성주 · 구윤모, 『미국 코로나19 대응정책 종합 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7.
6. 이기쁨, "코로나 19 확산 이후 국가별 정책대응과 고용지표 현황," 『노동리뷰』, 제187호, 2020, pp. 43-54.
7. 한국경영자총협회, "코로나19 대응 미국·유럽 주요국 고용유지정책 현황 및 시사점," 2020.
8. Albanesi, and Stefania, "Changing Business Cycles: The Role of Women's Employment,"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o. w25655, 2019.
9. Albanesi, Stefania, and Jiyeon Kim, "Effects of the COVID-19 Recession on the US Labor Market: Occupation, Family, and Gender,"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35, No. 3, 2021, pp. 3-24.
10. Alon, Titan Alon, Matthias Doepke, Jane Olmstead-Rumsey and Michèle Tertilt, "The Impact of COVID-19 on Gender Equality,"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o. w26947, 2020.
11. Arellano, Manuel, and Stephen Bond, "Some Tests of Specification for Panel Data: Monte Carlo Evidence and an Application to Employment Equation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58, No. 2, 1991, pp. 277-297.
12. Collins, Caitlyn, Liana Christin Landivar, Leah Ruppanner and William J. Scarborough, "COVID-19 and the Gendergap in Work Hours," *Gender Work Organ*, Vol. 28, Issue S1, 2021, pp. 101-112. (https://doi.org/10.1111/gwao.12506)
13. Kim, Jiyeon, "Searching for the Cause of the Gender Gap in Employment Losses during the COVID-19 Crisis,"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Vol. 43, No. 2, 2021, pp. 53-79.

COVID-19 Pandemic and Family-Friendly Policy*

Jungho Kim**

Abstract

The paper investigates whether family-friendly policies mitigated the labor market consequence of the COVID-19 pandemic. The analysis using OECD country-level panel data finds that the role of family-friendly policy is different depending on its type. Familiy cash benefit is found to have helped women and men continue to work during the pandemic, but neither childcare service or parental leave are not found to have had any significant effect. On the other hand, the paternity leave was found to improve men's employment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9. Hence, the findings indicate that cash benefit may be more effective than childcare service or parental leave during a catastrophic crisis in that it allows parents with children to have a more flexible arrangement.

Key Words: COVID19 pandemic, family-friendly policy, gender employment differential
JEL Classification: H50, J21

Received: Dec. 13, 2021. Revised: Dec. 29, 2021. Accepted: April 20, 2022.

* This work is largely based on Chapter 3 "Pandemic and Family-Friendly Policy" in 『Policy Analysis for Social Stability and Inclusion in Post-COVID19 Era』 by Myungheon Lee et al. (2021), which is a research report published by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The view expressed in this work is that of the author and does not necessarily represent those of KIEP.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0S1A3A2A02104190). I am grateful to two anonymous referees for their useful comments.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Ajou University, 206, World cup-ro, Yeongtong-gu, Suwon-si, Gyeonggi-do 16499, Korea, Phone: +82-31-219-2739, e-mail: jungho@ajou.ac.kr